

새정부 환경정책과 충남의 대응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1. 새정부의 국정과제

새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정목표를 발표하였다.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¹⁾, 맞춤형 고용·복지²⁾,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³⁾, 안전과 통합의 사회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며 그 추진기반은 신뢰받는 정부이다.

국정과제 중 환경과 관련된 과제는 국정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에 속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와, '패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전략에 속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인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이다.

1)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재난재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이다.

A.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새정부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 1) 추진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이며 41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이며 27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3) 추진전략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이며 14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4) 추진전략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패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며 34개 국정과제로 구성된다.
- 5) 추진전략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이며 17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과제는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⁶, 홍수·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의 실현이다.

B.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i)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체계 구축⁷, ii)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⁸, iii)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확립⁹할 계획이다.

2)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A.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i)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¹⁰, ii)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¹¹한다.

B.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 제고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확보¹²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관리를 강화¹³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¹⁴한다.

- 6)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119 영상신고 기능구현 및 GPS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확인 개선, 현장 중심의 U-안전관리시스템 구현, U-city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국민안전망 구축, 수요자 맞춤형·융합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7)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설치(13년)
- 8) 유해물질의 출시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법」을 제정(13년)하고 안전표시 등을 선진화(14년), 어린이, 노약자 등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을 진단하며 폐광산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13~17년, 114개지역)하고, 환경성질환 연구를 위한 환경보건센터 추가 지정
- 9)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피해배상제,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 원인자 미상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13~14년 중 법제화)
- 10)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논의에 대비,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 가스 배출량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9차, 2013, 11, 폴란드 바르샤바) 및 기후변화정상회의(2014년)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 11) 개도국 지원 장기재원이 GCF(녹색기후기금)를 통해 조성·활용되도록 유도하며,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등으로 녹색 ODA 비중 확대에 노력
- 12) 환경위성체('18년 발사)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강화, 이상기후 위험요인에 대응한 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13년)
- 13) 취약계층 중심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 강화(혹한·혹서 쉼터, 수인성질병모니터링), 기후-생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생물자원 조사·발굴, 위해외래종 관리 강화
- 14)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확대하고,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등 확대등을 위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C.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3년)에 '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설정¹⁵⁾한다(현재 '30년 비중 목표 11%). 또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보급·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정책을 전환¹⁶⁾하여 금년 말까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13~'35)을 수립·시행한다.

D.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하여 환경질 개선은 물론 우수 환경기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출산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i)환경오염시설의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재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한 경우에만 재허가, ii)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정수장 고도화 및 수도관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¹⁷⁾, iii)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13년~)하고, 전기차·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한다.

E.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하기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사업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제도개선 추진한다. 또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평가·협의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한다.

F.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그간 방치된 해양 공간의 이용·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i)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ii)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복원사업을 실시 하고,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 iii) 국가소유 연안유휴지 등을 활용 하여 체육시설, 친수공간, 텐트촌 등 휴양시설 조성¹⁸⁾, iv)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안침식 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추진¹⁹⁾, v)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선 보전을 위해 연안 지역 토지매입,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5)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업그레이드

16) 태양광·열 등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신재생 보급에 대한 규제,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시장의 병목해소 추진, 대규모 해상풍력)서남해안 2.5GW) 프로젝트 및 차세대태양광 등 R&D 투자확대로 풍력·태양광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17) 녹조 발생 원인물질 감축으로 수질오염 저감하고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 오염·훼손 하천의 수생태계(하천 1,667km), 백두대간, DMZ를 복원하여 한반도 핵심생태축을 보전

18) 전국 무인도서별로 개발·보존 필요성에 따라 관리유형을 지정, 이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19)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확대 및 자연친화적 침식대응 기술 R&D 추진.

G.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조기 실현한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을 제정('14년)하여 자원순환률 목표제를 도입하고, 자연자원·에너지의 선순환사회를 구축한다²⁰. 또한 매립·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소각처리부담제'를 도입('14년)한다²¹.

H. 지속가능 축산·수산업 육성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에 포함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²²·추진하고, 둘째 수산자원 증강, 적정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바다 목장·바다숲·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복지형 어선 개발·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를 추진한다.

2. 충남의 대응방안

재난·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산사태의 경우 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정밀 분석하여 도가 소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자체의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홍수의 경우 국가차원의 침수, 홍수 지도가 1990년 초반 이후 제작되지 않으므로 도 차원의 침수흔적지와 홍수피해지역을 도면화하여 홍수대책에 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류지의 확보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경우, 충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면폐광의 관리 문제이다. 또한 석탄폐광이 많은 충남의 실정에 따라 전반적인 폐광 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폐광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패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기 수립된 도 및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발전소 및 대형에너지 소비 산업체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시제도가 필요하다. 국정과제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는 실제로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

20)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대폭 확대('12년 3kg/인 → '17년 4.5kg/인)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13년), 폐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거래소'의 단계적 구축·운영, 안정적 원료공급 등을 위한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17년까지 7개소)

21) 덴마크('87년), 프랑스('93년), 영국('96년), 일본('00년) 등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무처리 매립 제로화가 사실상 실현,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시설확충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20년 기준 원유 5,700만배럴 대체)하고, 온실가스도 감축(온실가스 2,800만톤 감축)

22)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배출원은 화력발전이며 온실가스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충남지역에 과다하게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억제하고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지역자원세' 등을 시행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적응의 경우 기 수립된 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며 국비 조달 등의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광역생태네트워크의 단절지역 복원과 비오톱지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수립된지 오래된 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변환하여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중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온배수의 해양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도화하고, 가축분뇨에너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축산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분뇨해양투기 금지 이후 발생한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소규모 상수도시설의 안전성 점검을 제도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해 위험 취약지역 내 신규시설의 입지 불허 및 기 입주한 시설과 주택의 이주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바다숲 조성의 확대 시행과 호소화된 충남 내 연안만의 우수활동 원활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해안의 해빈, 사구의 침식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침식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원순화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마을의 시범적 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단점을 가려내어 충남에 적합한 에너지 순환형 마을을 조성하는 중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폐기물 매립·소각처리 부담제'의 시행이 충남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수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위에서 기술한 해양환경보전책과 연계하여 바다목장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 엄청난 양이 발생하지만 활용이 전무한 발전온배수를 이용한 육상양식을 조성하여 종묘를 방류하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축산의 분뇨처리는 위에 기술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수립과 연계되며, 기후변화적응계획 내 축산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0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대한민국정부, 2011, 국가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3, 국가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이인희, 2010,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대책, 충남리포트
 이인희, 2012, 기후변화시대의 농촌개발 방향, 농업농촌의 길 세미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충청남도, 2010, 충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충청남도, 2011, 충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